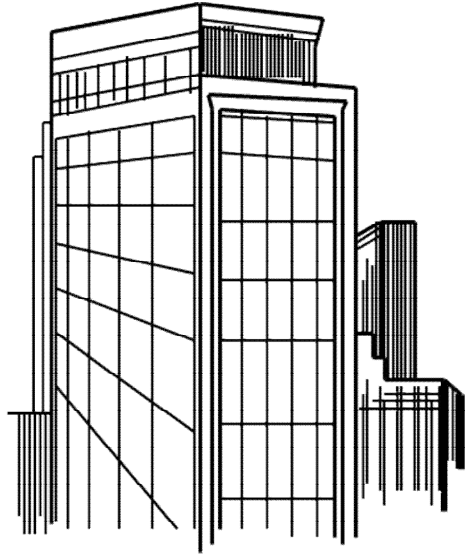


경영정보 브리핑

2021. 11. 1. ~ 2021. 11. 30.



정책이슈

ESG 갈수록 커지는데, 건설업계 전문인력 확보 난항	P. 1
기름값·통신비·전기료·밥값, 안 오른 게 없다, 인플레이 비상	P. 2
전력·원자재 대란에 '원전' 다시 뜬다	P. 3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개최	P. 4

조합·유관기관 등 동향

건설공제조합, 차기 이사장 공모 나서	P. 5
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1년 연임 확정	P. 5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교대역 희성빌딩 매입	P. 6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자산1조 클럽 가입 쾌거	P. 6
전력공기업 "205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중단"	P. 7

금융

월간경제지표	P. 8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 1%대의 기준금리 시작	P. 9
11월 FOMC : 테이퍼링의 시작	P. 9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	P. 10
美 전략비축유 방출	P. 10

경제·정책 이슈

▣ ESG 갈수록 커지는데, 건설업계 전문인력 확보 난항

1. 건설업계, ESG 전문가 확보 난항

- 11월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 분야별 ESG 영향 및 전문인력 수요 전망'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 건설기업들은 상대적으로 ESG 대응 역량이 부족하고, 특히 비용 부담과 환경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함.
- 또한 환경오염적 요소에 대한 규제, ESG 전반에 대한 사업 대응 계획 요구 등 건설사업의 착수 및 이행 단계에서 새로운 법적, 자율적 규제요인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2. 국내 주요 공공 발주기관 ESG경영 실행 의지 표명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은 ESG 채권을 발행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ESG가 공공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필수적인 사업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일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유지 개발 사업에 '제로에너지 빌딩' 건축을 도입하는 등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
- 다만, 현재 정부의 ESG 확산 전략은 당근보다는 '채찍'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업 추진에서 다양한 형태의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또한 ESG는 건설사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요소로 등장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 특히 국내 건설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민간건설 부문이 ESG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될 것으로 보임.

3. 건설업계 ESG전문인력 양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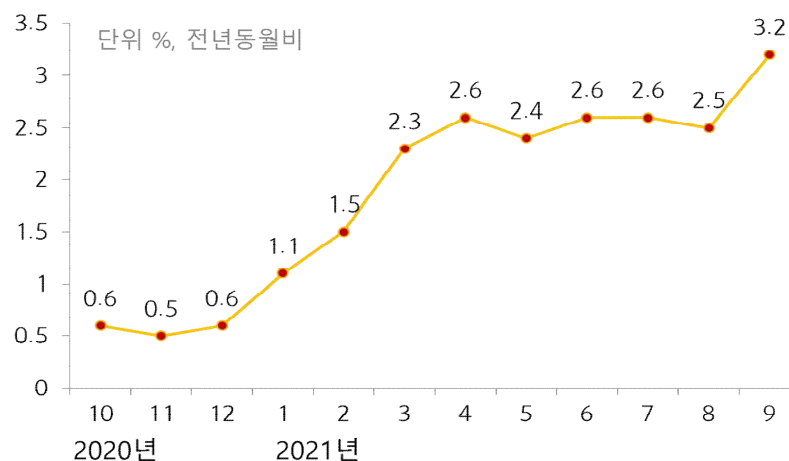
-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관련 기업들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ESG 이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부 및 건설 전문 교육기관, 대학 등이 연계해 건설업종 및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한 건설업 ESG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e대한경제, 2021. 11. 3.(수))

▣ 기름값·통신비·전기료·밥값, 안 오른 게 없다, 인플레 비상

1.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

- 통계청이 11월 2일 발표한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3%대 상승률은 근 10년만에 처음. 특히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석유값 급등과 지난해 1인당 2만원의 정부 통신비 지원이 빚어낸 기저효과가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됨.
- 정부는 이달에도 여전히 유가 상승과 소비심리 회복 등 상방요인이 있지만,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 소멸,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 등의 하방요인이 있다고 밝힘.

월별 소비자물가 지수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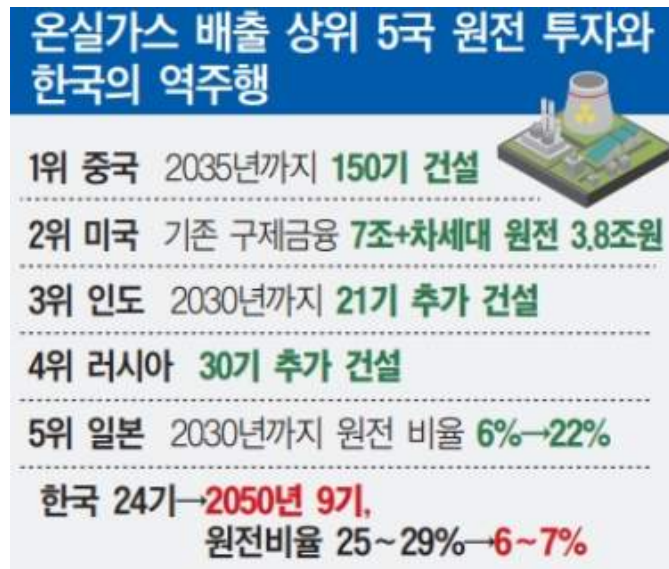
2. 연간 2%대 물가 상승 확실시 됨

- 정부는 남은 2개월 동안도 물가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혼재하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힘. 10월까지의 누계 상승률은 2.2%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2%대가 확실시됨. 통계청은 남은 두 달 동안 현재의 상승폭에서 $\pm 0.1\%p$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함.
- 기획재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세 지속 등 국내외 물가상방압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한시 인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또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추진하는 LNG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 인하분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1, 11. 2. (화))

▣ 전력·원자재 대란에 '원전' 다시 뜬다

1. 세계 각국, 탄소배출 절감 위해 원전 적극활용

- 온실가스 배출 상위 '빅5(중국·미국·인도·러시아·일본)' 국가가 유엔에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보고서에는 일제히 "탄소 저감에 원전을 활용할 것이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탄소 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4,400억달러(약 520조원)를 투입해 최소 150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는 원전 시장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원자력 재건을 추진 중. 일본 역시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6%에서 20 ~ 22%로 확대한다는 전략. 공동 기고문을 주도한 프랑스는 기존의 점진적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산업에 10억유로(약 1조 3,000억원)를 투입키로 함.



2. 한국, 원전 확대 추세와 역행하는 모양새

- 반면, 원전을 빼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한국의 '마이웨이'는 이 같은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원전 건설능력을 갖춘 세계 6국 중 하나인 한국이 탄소중립 달성의 필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전을 건너차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것.
-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을 축소하겠다는 한국의 선택은 과학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 장순흥 한동대 총장(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탈원전에서 탈탄소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 (e대한경제, 11. 9.(화))

▣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개최

1.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11. 17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1. 17.(수) 대한상의에서 제2차「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수렴하고, 구체적 지원정책의 첫 단추로서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과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대해 논의.
- 산자부 장관은 이 날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마련·발표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총력지원 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은 12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

2.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핵심 내용

- 탄소중립 R&D 17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2030 NDC 달성 기술과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술의 단계별 개발일정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 이를 위해 2021년 탄소중립 R&D 예산을 기존 8,200억에서 1.2조원으로 대폭 증액.

< 산업부 탄소중립 R&D 예산 >

구 분	2021년 예산	2022년 정부안
산 업	2,130억 원	4,197억 원
에너지	6,118억 원	7,814억 원
합 계	8,248억 원	1조 2,011억 원

-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이 시급한 17대 산업·에너지 분야를 선정. '기술 조사 → 기술 유형화 → 기술분석 → 우선순위 선정' 을 통한 핵심기술 도출예정. 핵심 17대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R&D 17대 중점분야 >

에너지		산업(수송)			공통
① 무탄소 발전	④ 에너지 저장	⑦ 철강	⑩ 정유	⑬ 산업공통설비	⑯ 자원순환
② 재생에너지	⑤ 계통 선진화	⑧ 석유화학	⑪ 반도체/디스플레이	⑭ 친환경 자동차	⑰ CCUS
③ 수소화	⑥ 에너지 고효율화	⑨ 시멘트	⑫ 일반산업	⑮ 친환경 선박	

- 산업부는「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번 R&D 전략을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으로 수립 중인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에도 반영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11. 17.(수))

조합 · 유관기관 등 동향

■ 건설공제조합, 차기 이사장 공모 나서

-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차기 이사장 공개 모집에 나선다고 22일 발표. 이번 공모는 지난 10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최영목 이사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것. 조합은 22일부터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이사장 후보자 모집을 공고하고 본격 공모 절차에 돌입.
- 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의 진행을 위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함.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응모자에 대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이사장 후보 1인을 결정. 이후 후속절차인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말까지 신임 이사장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임.
- 이번 공모서류의 제출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6일 18시까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이 가능. 조합 이사장추천위원회 측은 "조합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다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의 관심과 응모를 바란다."고 언급. (한경부동산, 2021. 11. 21.(일))

■ 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1년 연임 확정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1월 2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72회 총회를 개최하고 유 이사장과 배갑상 상임감사의 1년 연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유 이사장은 2018년 취임 첫해부터 당기순이익 1,000억원 이상 흑자 기조를 이어온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음. 특히 2019년 1,452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1,231억원의 흑자를 달성. 또 조합원 수는 취임 당시보다 8000개사 넘게 늘었고, 자본금도 8,8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유 이사장은 "저를 믿고 1년 더 조합 이사장을 맡겨주신 대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더 나은 경영성과로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변화를 선도하고 조합원과 상생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되겠다."고 언급. (뉴시스, 2021. 11. 2.(화))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교대역 희성빌딩 매입

-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최근 약 880억 원에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희성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남.
- 희성빌딩은 서울시 서초동 1694-10번지 소재. 2004년 준공됐으며 지하 3층 ~ 지상 15층, 연면적 9525.25㎡ 규모임. 앞서 한국자산신탁은 2019년 12월 말 리츠를 통해 희성빌딩을 매입한 바 있음. 에퀴티(equity) 177억원, 론(loan) 385억원, 보증금 등을 통해서 매입을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남. 리츠는 DB금융투자 73.45%, 유진투자증권 16.95%, 키움예스저축은행 9.6% 순. (파이낸셜뉴스, 11. 23.(화))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자산1조 클럽 가입 쾌거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창립 25년이 되는 올해 자산 1조원을 달성. 자본금 1,470억 원으로 시작한 지난 1996년 대비 약 6.8배 상승한 것. 그간 조합은 중장기 경영 전략에 따라 영업, 투자 확장 계획을 실천해 왔으며, 특히 2019년부터 보증영업확대와 대체투자 활성화를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로 올해 11월 17일 기준, 자산 1조를 초과 달성.
- 올해 5월 무디스로부터 해외신용등급 A3(안정적) 등급도 획득해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보증능력을 확인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보증을 적극 유치. 이에 더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900억 원 규모의 서초사옥을 매입한 바 있음.
- 올해 조합 관계자는 “자산1조 돌파를 계기로 영업확대 및 투자 다변화를 통해 영업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점운영 효율화와 사전관리 업무 강화 등 내부 역량을 향상시키겠다.”고 언급. (국토일보, 11. 24.(수))

■ 전력공기업 “205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중단”

- 한국전력 등 7개 전력공기업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 또 대규모 해상풍력, 차세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사업 개발을 주도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함.
- 한전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발전공기업은 11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1'(BIXPO 2021) 개막식에서 이런 내용의 탄소중립 비전인 '제로 포 그린(ZERO for Green)'을 발표.
- 전력공기업은 급속히 증가하는 재생에너지를 적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송 하도록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기로 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복잡성이 높아지는 전력망의 최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능형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
- 아울러 전기화로 인한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다양한 수요감축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효율 기술 개발 등으로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고 전력 수요의 분산화를 촉진할 방침.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
- 또 수전해 기술을 중점 개발해 그린수소의 생산 효율을 현재의 65% 수준에서 2030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 연료 전환을 위해선 2027년까지 20% 암모니아 혼소를 실증하고 2028년까지 50% 수소 혼소 기술을 개발할 계획.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2030년까지 석탄화력 500MW, 가스화력 150MW급으로 상용화해 포집 비용을 현재의 50% 수준인 t(톤)당 30달러까지 낮춘다는 목표도 수립함.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술은 회사별로 실증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전 회사가 공유할 방침.
- 전력공기업 관계자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는 전환(발전)부문의 탄소배출 제로화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이 필수"라며 "전력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전 과정에 걸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성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 (헤럴드경제 11. 10.(수))

금 용

▣ 월간 경제지표

기간 : 2021. 11. 1. ~ 2021. 11. 26.

구 분	변 동 폭	11. 1 기준가	11. 26 기준가
KOSPI	▼ 42.5	2978.94	2936.44
KOSDAQ	▲ 7.32	998.57	1005.89
S&P500	▼ 19.05	4613.67	4594.62
CD(91일, %)	▲ 0.13	1.12	1.25
국고채(3년,%)	▼ 0.245	2.108	1.863
회사채(3년, AA-, %)	▼ 0.147	2.580	2.433
국고채(10년, %)	▼ 0.251	2.506	2.255
미국고채(10년, %)	▼ 0.079	1.561	1.482

□ 증시

- [국내]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심리 발현으로 증시가 하락했으나 이후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대형주 강세가 나타나 증시 상승을 견인하며 혼조세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급등에 잠깐 주춤하였으나, 경제지표 호조와 기업실적 기대감에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음

□ 금리

- [국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모든 연물에서 전월 대비 발행량이 줄어 수익률이 하락세를 나타냄. 발행은 주로 중장기물 위주로 구성되었음.
-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로 정부의 채권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으로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단기물 중심으로 수익률이 상승하였음.

■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 1% 대의 기준금리 시작

- 한국은행은 이번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결정하여 기준금리가 1%로 올라섬.
 - ① 국내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심화
 - ② 물가 상방 압력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 ③ 여전히 실질기준금리를 고려할 때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함.
- 경제 전망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4%, 내년 +3%로 전망하여 기존에 전망했던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였음. 다만, 팬데믹 확산 및 높은 물가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점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 한국은행 총재는 1%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연준의 긴축우려보다는 국내 경기 상황을 확인하여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힘. 시장은 내년 2월 금통위에서 금리 추가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국내 금리에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를 선반영하며 상승했던 금리는 하락 안정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미래에셋증권 11. 26.(금))

■ 11월 FOMC : 테이퍼링의 시작

-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11월 말부터 매월 150억 달러씩 순자산 매입을 줄여 나가겠다고 발표하였음. 테이퍼링 속도는 향후 경제전망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음. 테이퍼링 속도가 발표와 동일할 경우 내년 6월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됨.
-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은 내년 중반 완화를 예상하며, 물가 상승 압력 역시 여전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유지하였음.
-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시작이 금리 인상의 직접적 신호는 아니며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추가된 엄격한 조건 만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강조하였음. 시장은 금리 인상 시점을 테이퍼링이 완료된 이후, 경제 상황에 비추어 내년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신한금융투자 11. 4.(목), NH투자증권 11. 4.(목), 하나금융투자 11. 4.(목))

■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

- 당초 올해 초과 세수를 10조원으로 예상했던 정부는 초과 세수 전망치를 19조원으로 수정하였음. 이미 국세 수입을 약 282조에서 314조로 한차례 수정한 바 있어, 세수 예측에 대한 신뢰성 및 지원금 감축을 위한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라는 비판에 직면하였음.
- 정부는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시장이 예상과 달리 더 활발해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 것이며, 정부의 고의성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밝힘. (조선비즈 11. 17.(수), 매일경제 11. 19.(금))
-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중 5조 3,000억원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2조 5,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쓸 계획이라고 밝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은 초과세수분과 기 확보 예산을 합해 12조 7,000억원이며, 일상회복 특별용자, 전기료 및 산재보험료 인하 및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조선일보 11. 23.(화))

■ 美 전략비축유 방출

-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바이든 美 대통령은 유가를 낮추고 팬데믹 탈출 과정에서 불거진 석유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5,0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중국, 인도, 일본, 영국도 미국의 비축유 방출 요청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방출 요청을 수용하고 방출 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우방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함. (조선비즈, 11. 23.(화))
- OPEC+는 비축유 대량 방출은 현재 시장 상황을 볼 때 정당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원유 증산계획을 재고하겠다고 반발하였음. 감산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 유가 진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OPEC+의 감산 가능성 발언에 유가는 해당 일에 오히려 1% 이상 상승하였음. (한국경제 11. 23.(화))